

이슈브리프

No. 2026-01(S)

동맹 '런웨이': 트럼프 2.0 시대 '모범 동맹국'의 역량

피터 리 연구위원

뒤네에스더 연구원

2026-03-09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모범 동맹국(model ally)'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025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과거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모범 동맹국'으로 칭한 바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5년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2026년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내 동맹국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칭하는지 설명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모범 동맹국' 정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기대치를 비교한다. 둘째, 2025 NSS와 2026 NDS를 분석해 '모범 동맹국'의 평가 기준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목표 상향 약속,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 투자 약속, △군비태세 접근권 제공 및 북한과 같은 하위 위협(lesser threats)에 대한 억제·방어 주도 약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관점에서 최근 한미 합의안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 존재하는 동맹국의 역량과 미국의 기대치 사이 간극인 '역량-기대 격차'가 지니는 시사점과 '모범 동맹국'이 됨으로써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한 대비, △미군 전력 태세 및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내 다자 안보협력 참여 확대 등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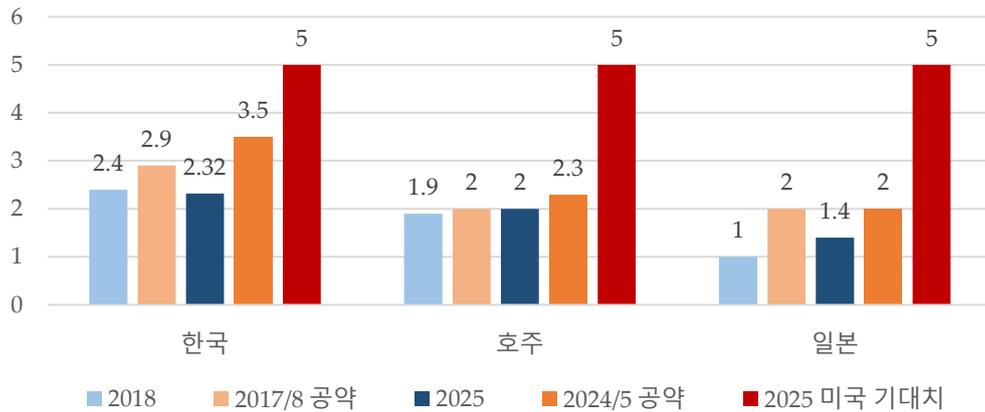
바이든과 트럼프 2.0의 '모범 동맹국' 정의 비교

경제적 측면에서 '모범 동맹국'의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 적자 유지, 대규모 투자 약속, 미국 내 제조 시설 건설, 특화된 자산 및 자원 공유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평가 기준은 확연히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와 NDS는 민주주의 가치 준수, 대(對)중·러 협력과 지역 내 공공재 기여 확대를 강조한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와 NDS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1. 국방비 지출 목표 상황

첫 번째 평가 기준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6 NDS를 통해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공식화했으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도 국방비 증액을 더욱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1기 당시 공약 및 국방비 지출과 비교 분석해 볼 때, 동맹국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은 물론, 스스로 발표한 계획조차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2025년 11월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것을 발표했다. 미국 측 기준인 GDP 5% 대비 부족한 1.5%p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했다.

그림 1. 트럼프 1기 및 2기 인태 지역 동맹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과 공약¹



자료.²

기준 2. 미국산 무기 구매 및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 투자

2025 NSS와 2026 NDS는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과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의 군사 투자 확대”를 통해 제1도련선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태 지역 내 무기 이전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 호주, 일본 3개국의 대미 무기 체계 의존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미 방위산업 기반의 공급 지연 문제까지 존재하는데, 이들 동맹국이 향후 얼마나 더 많은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총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분야 투자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준 3. ‘제1도련선’ 견제 참여 및 지역 억제력에 대한 책임 확대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의 최우선 과제는 제1도련선 내에 ‘거부에 의한 억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NDS를 통해 동맹국이 ‘하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미 국방장관은 이를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만으로 미국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일본과 호주는 미군에 더 큰 유연성과 접근권을 제공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별히 긍정적인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역량과 기대 간의 격차?

한국은 인태 지역에서 앞서 언급한 미국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호주와 일본이 국방비 지출을 제외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되지 않은 점은 국방비 지출 수준이 미국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시사한다.

표 1. 기준별 동맹국 평가 비교

	한국	호주	일본
기준 1: 국방비 지출 공약	○ (3.5%/실행 년도 미정)	X (2.4%)	X (2%)
기준 2: 대규모 무기 주문 및 방위산업 기반 투자	○ (5년간 250억 달러 주문)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	○ (44억 달러 주문) AUKUS 및 핵심 광물 투자	○ (49억 달러 주문) 에너지 등 투자
기준 3: 미군 전력 태세 지원 및 하위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 주도	△/○	△/-	△/-

다만 현재의 긍정적 평가는 주로 '공약'에 기반한 것이다.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치와 동맹국의 실제 재정 역량 사이에는 '역량-기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마찬가지로 잔여 임기 3년 내에 국방비 증액,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 등의 약속을 실현하도록 압박할 경우, 이는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모범 동맹국' 지위가 한국의 장기 전략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과 방기(abandonment)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국방비 지출과 무기 구매, 대북 책임 분담을 약속하며 '모범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내린 결정은 향후 한미관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제언

본 이슈브리프는 대미 동맹 정책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2025년에 발표된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5% 증액 요구를 회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동맹국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글로벌전략태세검토보고서(Global Posture Review, GPR)'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순환 배치 전환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셋째, 동맹국들은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도 대비해야 한다. 2025 NSS나 2026 NDS에서 '확장 억제'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은 바이든 행정부 및 트럼프 1기 당시와 비교해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NSS와 NDS는 "제1도련선 내 거부적 방어"와 "우리의 집단 방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맞춰 쿼드(Quad)나 스쿼드(Squad)와 같은 지역 다자안보체제 참여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는 역내 억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저자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 동맹체제, 한국과 호주의 외교안보 등이다.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뒤네에스더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원이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국제관계학 학사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거버넌스)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및 유로-대서양 지역의 미국 동맹체제, 한국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 정책, 디지털 거버넌스, 개발협력 등이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6-01).

("The Alliance Runway: The Capability-Expectations Gap of Being a "Model Ally" in Trump 2.0,"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586)

¹ 제시된 수치들은 추정치이며, 출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를 산출하는 세부 항목이 다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8년에는 국방비 증액을 공약하지 않았으나, 2017년 국방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유지해 온 기존의 기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2022년에는 국방비를 2%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apan PM Abe says no defence budget ceiling as 1 percent to GDP," *Reuters* (March 2, 2017), <https://www.reuters.com/article/business/japan-pm-abe-says-no-defence-budget-ceiling-as-1-percent-to-gdp-idUSKBN1690F6/>; "Kishida orders defense budget to rise to 2% of GDP in five years," *The Asahi Shimbun* (November 29, 2022),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780069> 참고.

²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milex.sipri.org/sipri/>; Kang Tae-hwa and Sarah Kim, "President plan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Korea JoongAng Daily* (July 19, 2017),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7/07/19/politics/President-plans-to-increase-defense-spending/3036059.htm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Budget" (2025), https://www.mnd.go.kr/mbshome/mbs/mndEN/subview.jsp?id=mndEN_030900000000;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Todd Newett, "3 percent of GDP for defence is no stretch. We did 2.9 percent in the Cold War," *ASPI The Strategist* (March 31, 2025), <https://www.aspistrategist.org.au/3-percent-of-gdp-for-defence-is-no-stretch-we-did-2-9-percent-in-the-cold-war/>;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A generational investment in Australia's Defence," Press release (May 14, 2024), <https://www.minister.defence.gov.au/media-releases/2024-05-14/generational-investment-australias-defence>; "Kishida orders defense budget to rise to 2% of GDP in five years," *The Asahi Shimbun* (November 29, 2022),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780069>; Nicole Brangwin, "Rising global defence expenditure," Australian Parliamentary Library (June 4, 2025),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Research/FlagPost/2025/June/Rising_global_defence_expenditure; Makiko Yamazaki, "Japan's new premier pledges early boost to defence spending, 'proactive' fiscal policy," *Reuters* (October 24, 202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s-new-premier-pledges-early-boost-defence-spending-proactive-fiscal-moves-2025-10-24/>.